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19-1호 | 2019년 10월 23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양정철 | www.idp.or.kr

## 한일 무역갈등 100일 “일본의 판정패”

- 통계로 본 對韓 수출규제 중간평가 -

최 환 석 연구위원

- 수출실적, 산업생산, 기업실적, 관광수지 영향 미미
- 소부장 탈일본화 등 오히려 산업경쟁력강화 계기
- 장기화되면 되레 일본경제 하방요인 작용 가능성
-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완화에 나서야할 시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1. 양국 무역갈등 중간평가는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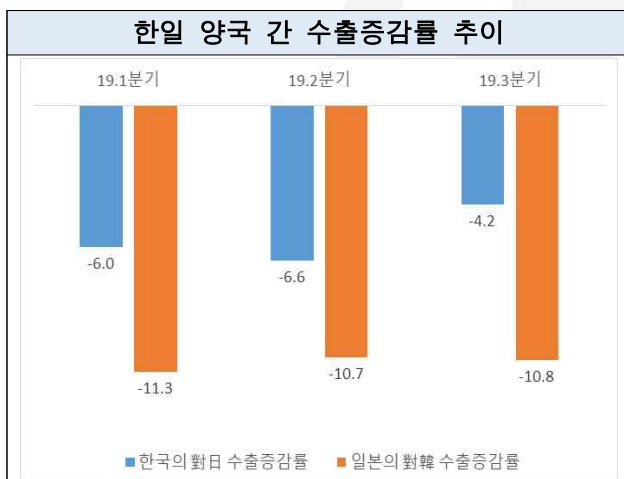
- 지난 7월 일본이 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한 이후 100여일이 경과
  - (리스트 규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3개 품목(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해 기존 포괄수출허가제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7.4일)
  - (캐치올 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결정, 전략물자의 對韓 수출에 대해 개별허가제 적용 결정(8.2일)
- 주요 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가치사슬 상 일정부분 경제적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Credit Suisse〉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통신장비 등 주요 기술분야의 실적개선 전망에 근거하여 한국 주식시장을 아시아권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9.17)
- 〈Reuters〉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8.30)
- 〈Citigroup〉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긍정적 실적 전망 유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조달처를 다변화함에 따라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8.12)
- 〈JP Morgan, Goldman Sachs〉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8월 초)
- 동시에 일본 내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두
  -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 ‘지금의 일본은 최악이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망한다’(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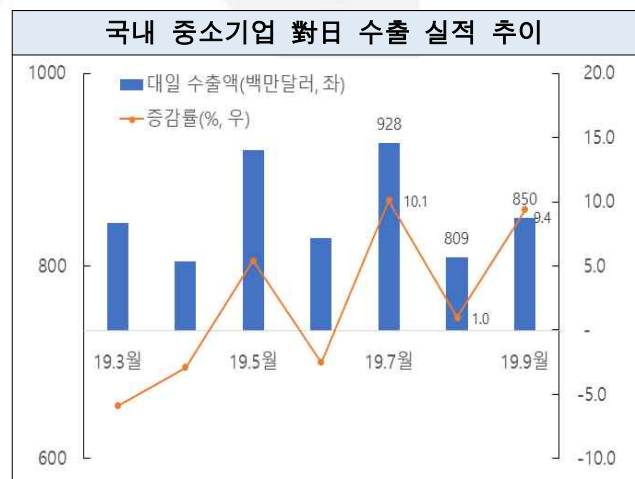
## 2. 주요 지표들은 수출규제가 일본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했음을 시사

### ○ (수출) 일본의 對韓 수출 실적은 한국의 對日 수출 실적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

- 금년 3분기(7~9월) 한국의 對日 수출액(71.1억달러)은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한 반면, 동기간 일본의 對韓 수출액(1.26조엔)은 10.8% 하락
- 일본의 월별 對韓 수출은 7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폭 확대\*, 무역흑자 큰 폭 감소( $\Delta 25.5\%$ )
  - \* 일본 對韓 수출증감률(%): (7월)  $\Delta 6.9 \rightarrow$  (8월)  $\Delta 9.4 \rightarrow$  (9월)  $\Delta 15.9$
- 특히 자발적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사실상 수입중단 상황 지속
  - \* 국내 일본 맥주 수입액(천달러): (18.9월) 674.9  $\rightarrow$  (19.7월) 434.2  $\rightarrow$  (19.9월) 6 ( $\Delta 99.1\%$ )
  - \* 국내 일본차 월별 판매대수(대): (18.9월) 2,744  $\rightarrow$  (19.7월) 2,674  $\rightarrow$  (19.9월) 1,103 ( $\Delta 59.8\%$ )
- 반면 기존 우려와 달리 국내 중소기업의 對日 수출실적은 화장품, 전자응용기기 품목 등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완만한 증가세 유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일본 재무성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생산)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생산에 끼친 영향도 현재까지 제한적

- 수출규제 이후 국내 생산(전산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KDI, 2019.10)
  - \* 전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6월)  $\Delta 0.9 \rightarrow$  (7월) 0.7  $\rightarrow$  (8월) 0.2
- 특히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 주력품목 생산도 견조한 흐름 시현
  - \* 8월 생산지수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12.2, (통신방송장비) 23.0
-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 발생 사례는 전무
  - 日 수출기업 부담 등으로 현 규제가 당장의 전면적 수출 제한으로 이어지진 않는 상황\*
    - \* 일본은 현재까지 리스트 규제 적용 3개 품목에 대해 총 8건의 對韓 수출을 승인: 고순도 불화수소 3건, EUV 레지스트 4건, 폴리이미드 1건(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10.11)
  - 국내 기업은 공급망을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조기 다변화하면서 필요한 재고를 확보
- 실제 국내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안정적 흐름 지속
  - 매출액: 3분기 3대 기업의 실적(전망)치는 수출규제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
  - 영업이익: 반도체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의 영향 때문(IBK투자증권, 10.22)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제조 대기업 실적(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19.2분기	19.3분기	19.2분기	19.3분기	19.2분기	19.3분기
매출액	56.1조원	62.0조원	6.4조원	6.3조원	5.3조원	5.8조원
영업이익	12.8조원	7.7조원	6,376억원	4,100억원	-368억원	-374억원

자료: 각 사 IR자료, 증권사 리포트

주: 3분기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실적은 각 증권사 예측치 컨센서스 기준

## ○ (산업) 소재부품장비 자립 필요성 확인,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기회적 계기로 작용

- 높은 전환비용 등으로 대체가 어려웠던 핵심품목의 탈일본 노력 본격 추진
  - 3개 핵심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의 국산화 노력 가시화, 상대적으로 낮은 순도가 허용되는 디스플레이 제품부터 일본제품 대체 시작\*
    - \* LG디스플레이: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OLED 및 LCD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불화수소를 100% 국산으로 대체
    - \* SK하이닉스: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을 확보, 국내 강소기업(램테크놀로지 등) 제품의 최종 품질시험 마무리, 활용 난이도가 기체보다 낮은 액체 불화수소부터 실제 생산라인 투입
    - \* 삼성전자: 국내 강소기업(원익머트리얼즈 등)과 협력체계 구축, EUV 반도체 공정에 에칭가스로 사용될 수 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시제품 생산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新활로 모색 기회 확대\*
    - \* 솔브레인, 후성, 램테크놀로지, 이엔에프(ENF)테크놀로지 등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의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납품 확대

- 개별 주체 간 협력 사례\*가 확산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
- \* 반도체 분야 공급기업 간 협력 사례: (주)미코 - (주)테스
- 소재부품 제조회사(미코) →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테스) → 반도체 제조회사(삼성전자 등)
- 반도체 소재부품 중 90% 이상을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세라믹 히터, 세라믹 정전척 공동기술 개발 진행

- 반면 수출규제로 인해 시장 내 日 수출기업의 실적악화 우려가 점차 부각

- 국내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국산화 노력 등으로 일본 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 對韓 수출실적이 급격히 악화
- 한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일본 기업은 국내에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
- \* 모리타화학(액체 불화수소 생산), 도쿄오카공업(포토레지스트 생산) 등
- 실제 대부분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폭은 전체 평균 대비 한국에서 3~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별 일본 수출 실적

	對한국 수출		전체 수출	
	수출액(백만엔)	증감률(%)	수출액(백만엔)	증감률(%)
반도체장비	23,160	-55.7	191,613	-12.9
금속가공기계	2,966	-50.5	84,993	-17.9
광학/정밀기계	15,304	-32.6	180,718	-10.9
유기화합물	18,606	-24.5	151,619	-7.3

자료: 일본 재무성

주1: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2: 2019년 9월 실적 기준

## ○ (관광)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일본 여행수지 악화, 지역경제 피해 누적

- 최근 訪日 한국인 수가 급감하면서 일본 여행수지가 악화(일본 재무성, 2019.10)
  - 9월 訪日 한국인 수가 6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수출규제 이후 한국인 방문객이 큰 폭 감소\*
    - \* 訪日 한국인 수(만명, 증감률): (7월) 59.3(△7.6) → (8월) 30.8(△48.0) → (9월) 20.1(△58.1)
  - 동기간 일본 여행수지도 상당폭 감소
    - \* 日 여행수지(백만엔): (6월) 2,332 → (7월) 2,293 → (8월) 1,518
-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본격화
  - 규슈, 쓰시마, 홋카이도, 오사카 등 한국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일부 지역 내 지방 소도시 관광산업은 상당한 피해 발생
  - 실제 일본중앙은행(BOJ)은 '한국의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일본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식 진단(사쿠라리포트, 2019.10)

여름 휴가철 관광교류 위축에 따른 경제적 피해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9.10)

- 여름 휴가철(7~8월) 양국 간 관광교류 위축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일본이 1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금년 휴가철 訪日 한국인(87만명)은 전년동기대비 27.6% 감소, 반면 동기간 訪韓 일본인(60만명)은 10.8% 증가
  - 생산유발효과: 韓 399억원 감소 vs 日 3,537억원 감소 (韓의 약 9배)
  - 부가가치유발효과: 韓 54억원 감소 vs 日 1,784억원 감소 (韓의 약 33배)

### 3. 이는 국민들의 애국심 + 우리 기업들의 저력 +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과 긴밀한 민관 공조의 성과

#### ○ 수출규제 이후 정부는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해 즉각적인 대응체계 가동, 민관 공조 강화

- (대외적)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명, 적극적 수출·통상 조치 실시
  - 국제공조 강화: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WTO 일반이사회(7.24) 등에서 부당성 공론화
  - WTO 제소: 3개 핵심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 제소(9.11)
- (대내적)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응대책 신속 실행
  - 산업현장 애로 지원 강화: 민관 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가동 등
  - 종합대책 수립: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중심으로 R&D 혁신 대책 수립 등

#### 범정부 대책 발표 주요 내용

일자	대책	주요 내용
8.2	정부 R&D 추경예산 확보	- 추경자금 2,732억원을 25개 품목 기술개발 등에 투입
8.3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 만기연장, 유동성공급 및 소재·부품·장비 시설투자 지원 등
8.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등
8.28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 핵심품목 선정 및 집중투자, R&D 주주기 장벽 해소 등
8.30	예타면제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92조원 면제

자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 ○ 이제 일본은 글로벌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완화할 필요

-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실효성도 크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日 수출업체 부담 확대, △개별 기업들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WTO 분쟁 절차 본격화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시장 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더욱 줄어들 것
  -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 회복 지연은 기업실적과 소비심리 등을 위축시켜 오히려 일본 경제에 더욱 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양국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상당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